

2020년 사회복지시설 감사 결과 보고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10.26. ~ 11.17. (17일간)
- 감사대상 : 사회복지시설 10개소(보조금 1억원 이상)

시설명	대표자	2019년 기준 보조금(천원)	감사일수	관련부서
①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박재구	744,100	2일	복지정책과
②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황재필	718,100	2일	복지정책과
③ 참좋은 지역아동센터	박선미	71,546	1일	복지정책과
④ 남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박은재	123,092	2일	가족행복과
⑤ 수영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김지영	118,092	2일	가족행복과
⑥ 부산카톨릭농아인복지회 주간보호시설	김순자	129,315	1일	가족행복과
⑦ 지니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부태환	153,932	1일	가족행복과
⑧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영숙	466,322	2일	복지정책과
⑨ 부산수영 시니어클럽	신남순	285,292	2일	가족행복과
⑩ 이삭의 집	이선희	121,532	2일	복지정책과

- 감사범위 : 2017.10.01. ~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계장 외 5명
- 감사방법 : 서면 및 실지감사 병행
- 감사중점
 - 시설의 예산·회계, 보조금 관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기능보강사업 추진 적정성
 - 후원금 및 수익금 사용 용도의 적정성
 - 종사자 채용, 급여, 교육 등 관리의 적정성

II 감사결과

□ 총괄 현황

(단위 : 건)

구분	행정상			재정상			
	계	시정	주의	계	여입	반납	지급
계	28	13	15	11/8,533,250원	4/7,621,010원	3/255,210원	4/657,030원
본처분	9	3	6	1/6,118,540원	1/6,118,540원	-	-
현지처리	19	10	9	10/2,414,710원	3/1,502,470원	3/255,210원	4/657,030원

III 종합평가

-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밀착된 복지전달체계를 구성·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액 1억원 이상 사회복지시설 9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수감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특히 지역자원등과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나, 규정 미준수로 인한 지적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 예산·회계·계약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하자검사 연 2회 실시하고 하자 검사기간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와 사용금지)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개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로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례도 있었음.

- 종사자 채용·인건비·퇴직금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 종사자 결격사유(범죄·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범죄 전력)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종사자 보수·수당 지급 시 일할 계산하지 않거나 착오 계산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또한 「지방회계법」을 위반하여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지연한 경우도 있었음.
- 시설관리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에 따라 시설 화재보험은 소멸식 상품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기수익자 등을 대표자 및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음.
-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관리부서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것으로 금번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의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지적사례

1 지적사항 총괄

(단위:건)

시설명	행정상			재정상			
	계	시정	주의	계	여입	반납	지급
□ □ □ □ □ □ 복지관	4	3	1	-	-	-	-
◇ ◇ ◇ ◇ ◇ ◇ ◇ 복지관	4	1	3	-	-	-	-
□ □ □ □ □ □ □ 센터	2	1	1	2(609,730원)	-	1(56,510원)	1(553,220원)
◇ ◇ ◇ ◇ ◇ ◇ ◇ 센터	3	1	2	1(60,920원)	1(60,920원)	-	-
□ □ □ □ □ □ □ 센터	3	2	1	1(130,960원)	-	1(130,960원)	-
○ ○ ○ ○ ○ ○ ○ ○ ○ ○ 센터	1	-	1	-	-	-	-
△ △ △ △ △ △ △ △ △ 센터	1	-	1	-	-	-	-
□ □ 센터	2	-	2	-	-	-	-
□ □ □ □ □	3	1	2	-	1(16,000원)	-	-
□ □ □ □	5	4	1	6(7,715,640원)	2(7,544,090원)	1(67,740원)	3(103,810원)

I 사례 1 | 하자검사 소홀

-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 하자검사 소홀 : □□□□□□복지관, ◇◇◇◇◇◇◇◇복지관

I 사례 2 | 후원금 신청 · 관리 · 지출 부적정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7조(세입 · 세출의 정의), 제8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2020 사회복지법인 · 시설 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 ↳ 후원금 예금이자 세입조치 부적정 : □□□□□□복지관
- ↳ 후원금 신청관리 부적정 : □□□□□□복지관
- ↳ 후원금 예산 편성 부적정 : ◇◇◇◇◇◇◇◇센터
- ↳ 후원금 사용 부적정 : □□□□

Ⅰ 사례 3 | 계약업무 처리 소홀

-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세액)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근거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 도급계약 체결시 인지세 미부과 : ◇◇◇◇◇◇◇◇복지관

Ⅰ 사례 4 | 예·결산 절차 및 예산전용 부적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6조(예산의 전용),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 예산 전용 부적정 : □□□□□□□□센터
- ↳ 예산안 공고 누락 : □□□□□□□□센터
- ↳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미공개 : ○○○○○○○○○○○○센터

Ⅰ 사례 1 | 종사자 범죄·성범죄, 아동학대·노인학대관련 범죄 미조회 및 조회 지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제1호에 따라 “제19조 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 범죄경력·성범죄경력 조회 지연,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미조회
: □□□□□□ 복지관
-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지연,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미조회
: ◇◇◇◇◇◇◇◇ 복지관
- ↳ 범죄경력·성범죄경력 조회 지연
: ◇◇◇◇◇◇◇◇ 센터, △△△△△△△△△△ 센터
- ↳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미조회 : □□ 센터
- ↳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미조회 : □□□□□□

Ⅰ 사례 2 | 종사자 보수·수당 지급 부적정

-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 휴가비는 재직중인 종사자에 대하여 봉급액의 120%(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에 속한달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문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종사자 보수 지급 부적정 : □□□□□□□센터, ◇◇◇◇◇◇◇◇센터, □□□□□□, □□□□

↳ 종사자 명절 휴가비 지급 부적정 : □□□□

↳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부적정 및 집행잔액 미반납 : □□□□

Ⅰ 사례 3 | 종사자·조리사 건강진단 지연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 조리사 건강진단 지연 : □□□□복지관

↳ 종사자 건강진단 지연 : □□□□□

Ⅰ 사례 4 | 퇴직금 지급 및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퇴직금 지급 지연 및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 □□□□□□□□센터

↳ 퇴직금 지급 지연 : □□센터

Ⅰ 사례 5 |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지연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근거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지연 : □□□□

4 시설 관리 분야

Ⅰ 사례 1 | 화재보험가입 부적정

-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제2호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보험은 가능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만기환급금 수령 후 반드시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되어야 한다.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 화재보험가입 부적정 : □□□□□□□□센터